## 시론

# 6·3 지방 및 보궐선거 결과의 함의들

오 수 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역대 다른 선거에서도 숨 막히는 초접전의 반전 드라마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 6·3 지방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만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개표상황도 드물지 않았을까 싶다.

특히 선거 초반부터 여권의 압승과 야권의 참패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단 한곳이라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였던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에서의 역전드라마는 우리 선거사(選擧史)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 결과에서 어떠한 함의(含意)를 찾고 이를 발전적으로 수용해야 할까.

흔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치뤄진 선거는 새로운 정부(政府)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띠게 되고 선거결과 또한 자연스럽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支持度)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이번 6·3 선거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남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치뤄졌다는 점에서 기본 구도에서부터 여당에 유리한 선거였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입장 차이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심각한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거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만큼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불문가지로 예측됐다.

그러나 역시 '선거는 마지막 며칠이 중요하다'거나 '선거는 마지막 투표함이 열려봐야 한다'는 말처럼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떻든 선거 결과는 광역자치단체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했고, 특히 보수색채가 짙은 영남의 부산과 울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을 이겼으니 여당의 '압승'이라고 할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물론이고 여론 또한 여당의 압승이라는 평가보다는 '국민들로부터 결코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초반의 분위기와는 달리 결과가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혹자는 지방선거의 백미(白眉)로 꼽히는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역전패한 주된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물론 부동산 문제가 서울 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역대 선거에서처럼 이번 6·3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인은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와 지리멸렬한 야당의 마지막 숨통만은 지켜줘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물론 이러한 정서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다거나 국민의힘이 내란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내란사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앞장 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내란을 방조하고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정당은 국민의힘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 그것은 1년 전의 일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유권자들의 뇌리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민주당에 12석이라는 숫자상의 압승을 안겨주면서도 중요한 몇 곳에서 국민의힘에 승리를 안겨준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내란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고무된 민주당 지도부의 지나친 강공책, 예컨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3곳의 보궐선거에서도 당초 대구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여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경기 평택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부산 북구갑에서 야권이 승리한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선거결과가 국민들의 여권 견제심리라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 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여당의 공천 잘못이라든가 단일화 실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을까. 한마디로 여당에는 제반 권력의 행사에 '신중함과 절제'를, 야당에게는 새롭게 태어나는 수준의 '개혁'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 현장칼럼

#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것

최 강 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아동들은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해간다. 또래보다 빠르게 이해하는 아이도 있고, 조금 더 천천히 익히며 반복을 통해 배움을 쌓아가는 아이도 있다. 그중에서도 '조금 느린 아동들'은 쉽게 걱정의 대상으로 여겨지곤 한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이거나, 설명을 여러 번 들어야 이해하는 모습, 또래 관계에서 자주 오해를 겪는 모습은 때로 '노력 부족'이나 '집중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은 아이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이 아동들은 뒤처진 존재가 아니라, 단지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고 있는 존재다.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약 70-85(CDSM-IV: IQ 71-84) 사이에 해당하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겉으로는 또래와 큰 차이가 없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여러 단계의 지시를 한 번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또래 관계에서도 상황을 유연하게 해석하기보다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어려움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해의 방식과 속도의 차이'에 가깝다.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아동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다. '왜 이렇게 느릴까'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를 묻는 사회가 돼야 한다. 느림을 문제로 규정하기보다, 다양한 배움의 속도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느린학습자 아동들은 비로소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기다림과 공감 중심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작은 성취를 인정해주는 경험이 아동들의 자신감을 키운다. 학교에서는 학습 속도를 고려한 유연한 수업과 실패를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1:1 맞춤형 지도는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또래 관계까지 돕는다. 결국 경계선 지능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필요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복권위원회와 사랑의 열매 지원을 통해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을 7년째 운영하며, 경계선 지능아동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파견전문가 양성, 1:1 맞춤형 학습 및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부모교육과 종사자 역량강화활동까지 아동을 둘러싼 환경 전반을 함께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아동을 돕는 것을 넘어, 아동을 이해하는 주변의 시선과 환경을 함께 바꾸는 과정이기도 하다.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존재로 분리하는 지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환경이다. 조금 느린 걸음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사회가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앞으로도 아동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믿고,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경계선 지능아동들(느린학습자)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독자투고

# 쉬운 돈의 유혹 대포통장의 덫

최근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계좌를 넘겨받고, 이를 불법 도박 자금 세탁에 이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조직은 더이상 폭력이나 협박만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 사람들의 절박함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범죄의 통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업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유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생계를 위해 낯선 지역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등 누구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범죄조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노리며, "급전 필요한 유학생 연락 달라", "저렴하게 환전해 주겠다",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접근하지만 그 끝에는 금융범죄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계좌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의 신용과 금융 활동이 담긴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의 자금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본인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로서 각종 법적 책임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범죄 예방은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할 이유는 없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조직이 노리는 것은 계좌가 아닌, 사람의 절박함과 방심, 그리고 순간의 판단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범죄 수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계할 때,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허준석·목포경찰서 치안정보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社 說

# 점차 가시화될 전남광주통합시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선 고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하면서 "먼저 통합을 했고 법률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겠냐"고 밝혔다.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자는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조만간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시사해 특히 주목받았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정은승 인수위원장도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혁신과 도전의 DNA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격적인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금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한다.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 두고 대폭적인 권한 이양 등으로 국정 과제인 '5극3특'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특별한 보상이 점차 가시화되는 것이다. 끝내 지역 갈등과 속도 조절을 구실로 행정통합이 무산된 대전·충남 등과는 뚜렷히 차별화돼야 하겠다. 사실상 4년 뒤 차기 선거로 공이 넘어갔지만 6·3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역단체장이 모두 바뀐 만큼 불씨를 되살릴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세워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막고 부강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 지역이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재차 공개 약속한 재정적 지원과 자치 권한 배분, 산업 배치와 공공기관 이전 등 최대한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실행돼야 한다.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광역단체장들은 정부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규모도 미흡하다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었다. 급기야 전남광주 행정통합 비용 준비 논란에는 '대전도 큰일 날 뻔!'이란 문구의 플래카드가 대전역 앞에 내걸리기도 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꼭 성공해야 한다. 공공기관 최우선 이전과 입주기업 특혜,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등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정치적 이해 관계를 극복하고 특별시민의 의지를 한데 결집해야 하는 때다.

# 장기간 표류 첨단 3지구 공영차고지 실질 대책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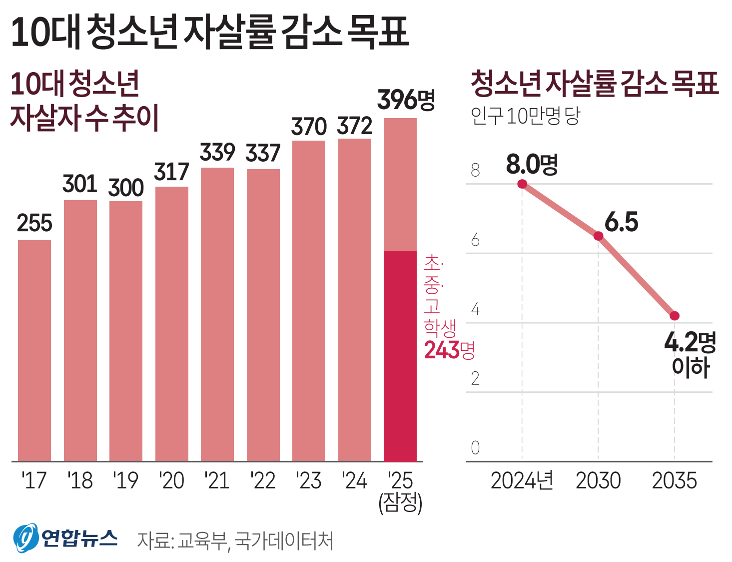
공영차고지 확충 없이는 시내 주택가와 이면도로를 사실상 봉쇄한 밤샘주차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 광주지역 일반·덤프·밴·특수용도 화물차는 총 9만1천379대에 이른다. 하지만 공영차고지는 광주에서 진곡산단(423면)과 평동3차산단(238면) 등 2곳 뿐이어서 운전자들 사이 추가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첨단 3지구 공영차고지 사업이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4년 수립한 권역별 화물차고지 조성 계획에 장성군 남면 월정리 일원에 247면 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예상 사업비는 총 180억원(국비 70%·시비 30%)으로 책정했다. 당초에 2018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인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일부 공사만 이뤄진 채 방치돼 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거해 지원해온 국비가 2020년을 끝으로 만료돼 시비 투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화물차 밤샘주차는 관계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에도 도돌이표에 가깝다. 서울·경기·전남 등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둔 차량들도 상당수다. 고질적인 무질서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인근 주민의 민원 또한 잇따르고 있다.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을 등록된 차고지 외 장소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차량별로 전용 공간이 있긴 해도 대부분 외곽에 위치해 주거 지역으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속을 해봐야 잠깐 그때 뿐으로, 도심 인근 공영차고지 마련이 실질 해법으로 보인다.

수년동안 진척 없는 첨단3지구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이 두고두고 아쉽다. 목표대로 진작에 마무리됐다면 주차난에 숨통이 트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에 화물차고지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매입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돼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한다.

## 그래픽 뉴스




교육부는 15개 부처가 참여한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 이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10대 자살률을 10년 후에는 약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중·고에서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으로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에도 공을 들인다. 정부는 '마음 시피알(CPR) 교육'(가칭) 등을 통한 생명지킴이 교원·청소년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편집국 | | | | | | |
|---|---|---|---|---|---|---|
| 편집부 650-2090 | 지역특집부 | 650-2060 | 광고문의 | 650-2099 | FAX | |
| 정치부 650-2030 | 사진부 | 650-2080 | 마케팅본부 | 650-2070 | 광고국 | 650-2016 |
| 경제부 650-2050 | 논설실 | 650-2006 | 경영지원국 | 650-2011 | 편집국 | 650-2017 |
| 사회부 650-2040 | TV본부 | 650-2009 | 사업본부 | 650-2007 | 업무국 | 650-2019 |
| 문체부 650-2065 | 서울지사(02) | 786-9488 | 업무국 | 650-2020 |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